"국립난대수목원 최적지는 완도"

전남도, 수목원 최종 점검 막판 유치전 총력
경남 거제와 경합…산림청 8월말 최종 결정

전남도가 8월 말 대상지가 최종 결정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종 점검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21일 "전남도와 (사)숲속의전남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선정과 관련한 산림청의 현장·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지난 18일 보성에서 숲속의전남 긴급 이사회를 열어 유치 대응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8월 초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를 대상으로 현장·타당성 평가를 거쳐 8월 말께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현재 완도수목원 400~500ha 부지에 2500억원을 투자해 기후대별 온실, 식물연구지구, 교육휴양지구, 6차 산업화지구를 조성하는 기본구상을 갖고 있다.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난대상록활엽수종이 성림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770여 종의 자생식물이 서식, 국내 최고·최대의 난대숲 자원과 다양한 산림식물종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에서 난대숲과 식물생리 전문가인 서희원 기술사는 "난대상록활엽수는 토양 요구도가 매우 높은 수목으로 대상지 선정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기후가 적합한 지역의 소나무·참나무림에 난대활엽수를 많이 심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문 것이 그 이유"라고 밝혀 완도수목원이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정은조 이사장은 "완도수목원은 지난 5월 산림청 타당성 평가 기준에 따른 전남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에서 그 타당성이 이미 검증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사)숲속의전남은 국가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의 모태이자 전남도 대표 브랜드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의 민간 협력 단체다. 임업인, 정치인, 시민단체 등 1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여수 태풍 피해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오전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남해안으로 접근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여수시 화양면 관기배수장을 방문, 고재영 여수부시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 '재개발 원주민 보호책' 호평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문서화…8차례 교육 주민 700명 참여

광주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시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쇄적인 조합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시행중이다. 무엇보다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성 분석과 추정 분담금 예측, 조합의 정관이나 용역 계약서·회의록 등 공개 대상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제공해 조합 운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원의 권익 보장과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 제작·배포, 인권 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을 추진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해 7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 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국방위 소위 통과

피해 신청만으로도 보상 … 현재 12건 소송중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군용 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 보상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12년 관련 법률(안)이 처음 상정된 이래 17년 동안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던 13건의 유사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대법원 판례 85웨를 이상) ▲장기적으로 군 공항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신청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음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건수는 총 20건(14만242명, 1661억원) 중 8건(2만1900명, 657억원)은 확정판결, 12건(6만2057명, 499억원)은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소송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부담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국회,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 마련, 군 작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 실시, 비행경로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청년위원회와 대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21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양 도시의 청년 정책을 공유하는 토론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구 청년들 광주서 '달빛교류'

광주시 청년위원회와 대구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2019세계청년축제' 기간인 20일부터 21일까지 광주에서 달빛교류 행사를 가졌다.

2016년부터 시작한 두 도시 청년위원회 교류는 광주-대구 달빛동맹의 하나로 청년세대의 우의를 다지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비롯해 대구시와 청년센터 관계자,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 했다.

첫날인 20일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청년정책 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양 도시의 청년 정책을 공유했다.

이어 세계청년축제장으로 자리를 옮겨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자취를 따라 걷는 야간 퍼레이드(5.18㎞ Night Light Run)에 동참해 나눔과 연대의 5·18정신을 공유하고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청년들과 어울렸다.

21일에는 연극과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진 융합형 도심 투어버스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를 타고 5·18 주요 사적지를 돌아보며 5·18 당시 평범했던 광주 시민의 희생과 용기, 슬픔을 공감했다.

오는 9월에는 대구 청년주간에 맞춰 광주청년위원이 대구를 방문 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낙후된 어촌 개발 해법 찾기

전남도, 25일 목포서 어촌뉴딜 300 사업 토론회

정부의 낙후 어촌 개발 지원사업인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한 어촌 혁신방안과 미래발전전략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오는 2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방치돼 있던 지방어항, 소규모 항·포구, 어촌 등에 기반시설과 어촌특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도는 21일 "전남 블루자원의 핵심인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낙후된 어촌·어항의 시설 및 콘텐츠의 보강이라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촌 300곳을 선정해 모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전남도는 2019년 사업대상지 전국 70곳 가운데 2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전남도는 2020년 공모를 앞두고, 올 초부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설명회 개최, 후보지 어촌 역량강화교육 실시,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도, 광주전남연구원, 연합뉴스 등이 공동 주최·주관하며,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농어촌공사·수협중앙회 관계자와 지역 어민들이 참석한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이 어촌사회 혁신과 어촌활성화전략,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순호 한국 글로벌 섬재단 대표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권준영 해양수산부 부단장·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단장·이종화 목포대 교수·김준 광주전남연구원·김호연 자율관리연합회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 등 16곳이 바다에 접해있으며, 2165개의 섬, 6743km의 해안선으로 각각 전국의 65%, 4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양식어장의 75%가 전남에 자리해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7%를 점유하는 등 전남은 해양수산자원의 보고다. 다만 관광객 및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보성·영광 균형발전사업 '우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순천·보성·영광 등 전남도내 3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시군은 9월 25~27일 순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 균형위의 기관표창을 받는다.

순천시의 '생태창조체험의 메카, 유유낙락 향림골 만들기' 사업은 쇠락한 원도심을 살리고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하는 생태텃밭 분양과 순천형 친환경 장터의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성군의 '오감만족! 녹차향 가득한 다향 울림촌' 사업은 연계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권역활성화센터 운영관리의 책임자는 주민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영광군의 '3대가 함께 걷는 물무산 행복숲' 사업은 계단과 데크가 없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숲속 둘레길을 생활권에 조성하고, 산림복지 시설이 없는 군에 복지숲을 만들어 지역 간 산림복지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